과거사 고개숙인 박근혜 국민에 '진정성' 통할까

"지지율 급락 고육책" 비판 속 통합행보 후속조치 관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4일 부친인 박정희 정권 시대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공식 사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과거사 인식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정체 및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선 레이스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 후보의 이날 '과거사 사과'에 대해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후보로서 과거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어두운 부분과 그 피해자들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한 것"이라며 "국민이 박 후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박 후보가 유신과 5·16에 대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이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들에게 나름대로 사과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이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지가 변수다.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인식을 고수해왔던 박 후보의 입장 변화가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를 만회해 보려는 고육책이자 선거공학적 접근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후보에게 있어 과거사 문제는 대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40%를 웃돌던 공고한 지지율은 지난 10일 '인혁당 두 개의 판결' 발언 논란을 시작으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컨벤션 효과'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 효과'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각종 여론조사 양자 가상대결에서 두 사람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다자구도 역시 박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지지율 격차는 크게 좁혀져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박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근접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참모들은 박 후보가 과거사 문제를 조속히 정리, 과감한 대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 형성되는 민심이 초반 대선 판세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석 이전에 과거사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후보가 부친인 박정희 정권 시절의 어두운 역사와 관련한 공식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후속 조치와 광폭의 대통합 행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후보가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지지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박 후보가 현실성 있는 후속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진정성 측면에서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려워 긍정적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과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박 후보는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 '0~2세 전면 무상보육' 왜 포기했나

무차별 보육시설 이용 年 7천억 감당 어려워

정부의 '만0~2세 전면 무상보육' 포기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과 무차별적인 시설보육 이용 현상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관계없는 양육보조금 지급에 7000억원 더 필요=이번에 마련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드는 '만 0~2세 양육·보육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 4조6000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이 기존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에서 소득하위 70%가구로 크게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셈인데, 이는 보육료의 실수요를 따져 종일반과 반(半)일반으로 나눠 차등 지원함에 따라 양육보조금 증가분이 상쇄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비만 따지면 내년 양육보조금 예산은 6271억원으로 올해 1026억원보다 5245억원이나 폭증했지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은 2조3913억원에서 2조1623억원에서 2290억원 줄었다. 만약 정부가 내년 보육 지원 체계에서 '소득에 관계없는 전면 무상보육' 원칙을 고수했다면 소득 상위 30% 가구의 0~2세에 지급할 6419억원(국비+지방비)의 양육보조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100% 무상 보육을 실현하려면 내년 예산이 7185억원 정도 더 늘어나야 하는데,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0~2세 '가정 양육' 원칙 반영=소득과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만 보내면 100%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하는 현 제도가 불필요한 복지 수요를 낳는 결과를 빚었다.

지난해말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시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소득하위 70%)과 달리 0~2세 모든 가구로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예산을 끼워넣었고 예산은 3698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던 부모들까지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육시설을 이용한 0~2세는 65만명 정도였으나 올해의 경우 78만명으로 13만명이나 늘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공급 부족 상황이 야기됐고, 민간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업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 원로 53명 "박근혜 대통령 자격 없다"

인혁당 유족 "마음에 없는 사과 더 큰 상처"

광주지역 재야 원로인사들은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신정권 당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실질적인 퍼스트레이디로서 새마을운동 등 맹렬한 역할을 수행한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기숙, 나간채, 안성례, 박화강 씨 등 재야 원로인사 53명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박 후보가 오늘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힌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 후보의 오늘 발표는 과거행적과 발언으로 볼 때 장시간에 걸친 고뇌에 찬 결단이라기보다는 선거용 사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올해 대선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해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한다"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역할을 주문하고 "후보단일화 과정과 절차, 방식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감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혁당 피해자 유족들도 "진정성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인혁당 피해자 유족 단체인 4·9 통일평화재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해 수세에 몰리게 되자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전혀 마음에 없는 말로 사과했다"며 "유족은 박 후보의 이런 사과에 다시 한번 너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 후보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 달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근혜, 아버지 명예 회복 위해 정치"

새누리당 김재원 대변인 임명 고민

새누리당이 신임 대변인으로 내정된 김재원 의원이 내정 직후 '취중 막말' 파문을 일으키자 임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박근혜 후보를 보좌했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김 의원은 지난 23일 새 공동대변인에 내정되자 일요일에도 불구,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해 출입기자들과의 저녁식사를 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이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대변인은 박 후보의 정치입문 배경에 대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박 후보의 기자회견 일정을 전하며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역사인식 문제로 곤혹스러운 박 후보를 더욱 궁지에 몰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 같은 발언은 외부로 알려졌고 김 의원은 진위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식사 자리의 발언을 정보보고 했다"며 기자들을 향해 "개XX", "병신XX" 등 폭언을 퍼부은 것을 전해졌다.

파문이 확산하자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대변인 임명 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한 핵심 당직자는 "임명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이성을 잃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이날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 기자실과 국회 본관 기자실을 잇달아 찾아 "죄송하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日日만평

- 김종두

못 잡으면 끝이다